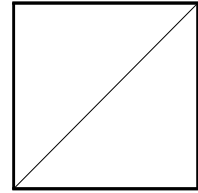


3년 비공개



의안번호	제 133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5. 20. (제 10 차)	

에스엘(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출자	위원장 손병두
제출연월일	2020. 5. 20.

1. 의결주문

에스엘(주)의 제46기(2013.1.1.~2013.12.31.)부터 제51기(2018.1.1.~2018.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1,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에스엘(주)의 제46기(2013.1.1.~2013.12.31.)부터 제51기(2018.1.1.~2018.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에스엘(주)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 (연결기준, '16년 12,980백만원, '17년 24,899백만원, '18년 13,729백만원)○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연결기준, '13년 23,600백만원, '14년 29,990백만원, '15년 33,871백만원, '16년 38,684백만원, '17년 35,632백만원)
조치 내용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회사 1,784.7백만원, 대표이사 OOO 178.4백만원, 담당임원 OOO 178.4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4}○ 담당임원(OOO) 해임권고^{*5} 및 직무정지 6월^{*6}○ 검찰통보 (회사, OOO)^{*7}○ 시정요구^{*8}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낮으므로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가.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

- 회사는 '16년부터 현대차 인도법인의 신차판매 증가 등으로 자회사인 SL Lumax(인도 소재 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자
 - 동 이익 증가가 향후 현대차 등에 공급하는 자동차 램프 등의 납품단가의 결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 '16년, '17년에 SL Lumax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등을 임의로 조정하여 영업 이익을 각각 130억원, 119억원 과소계상하였고,
 - '18년에는 SL Lumax의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자, 위 조정사항 중 일부를 환입하여, 영업이익을 115억원으로 과대계상하였음
- 회사가 위 영업이익 조정 과정에서 외부감사인(OO회계법인)의 '17.3분기 SL Lumax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대한 지적 이후
 - 회계팀, 재무팀 등 관련 부서간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통해 SL Lumax의 영업 이익 조정 방식 및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한 점,
 - 동 논의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SL Lumax의 영업이익을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회사는 위 영업이익 조정이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또는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중요 문서·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의'로 판단 [舊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1.가.1)]

나.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 회사는 해외 종속·관계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의도가 있었던 점, 해외 종속·관계기업의 배당재원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국내 과세소득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여 배당소득 등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공제금액도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 외국납부세액 공제 효과는 미래 상황에 대한 판단 및 가정에 따라 다르게 추정될 수 있는 점,

- 회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위험보다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로 보아 “과실”로 판단 [舊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3.가.2)]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가중 : 1단계 가중

- 회사는 감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되어 1단계 가중 [舊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VI.2.가.3)]

○ 감경 : 해당사항 없음

*4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따라 감사인지정 2년이나, 2018사업연도('18.1.1.~'18.12.31.)에 대한 조치가 있어 외감규정 제10조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5 담당임원 해임권고 부과 조치대상이 되는 회계연도('16년~'18년) 중 공시담당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회사의 자금 및 회계를 총괄하여 동 회계 처리위반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000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

*6 2018 사업연도('18.1.1.~'18.12.31.)에 대한 조치가 있어 외부감사법 제29조에 따라 직무정지 6월 병과

*7 검찰통보 사항 : 회사, 공시담당임원 000 사장

- 회사의 공시담당임원 000은 제49기~제51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분식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바, ‘검찰통보’ 조치

*8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아 시정요구

※ 고의 III단계의 기본조치에 따라 감사위원 해임권고가 원칙이나, '16년 ~'18년 비상근 감사위원(000, 000, 000)은 회사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고, 특이사항 등을 재무담당 000 실장에게 질의하고 소명을 듣는 등 일상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지적사항 가. 종속기업의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과 관련하여 경영진(공시담당임원 등)이 종속기업의 영업이익 조정 여부를 설명하지 않는 등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감사의 직무 소홀을 ‘과실’로 판단하고 감사 해임권고 조치하지 아니함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II.다.]

나.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기업 영업이익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기준, '16년 12,980백만원, '17년 24,899백만원, '18년 13,729백만원) ○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기준, '13년 23,600백만원, '14년 29,990백만원, '15년 33,871백만원, '16년 38,684백만원, '17년 35,632백만원)
조치 내용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회계법인(과실 II→III^{*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제외점수 10점 ○ 공인회계사 OOO(과실 III→V^{*3})['13년 주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공인회계사 OOO(과실 III→IV^{*3})['14년~'16년 주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공인회계사 OOO(과실 II→III^{*3})['17년~'18년 주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 공인회계사 OOO(과실 II→IV^{3,4})['16~'17년 보조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공인회계사 OOO(과실 III→감경시 최소^{3,4})['13~'15년 보조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없음 ○ 공인회계사 OOO(과실 V→감경시 최소⁴)['16년 보조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없음 ○ 공인회계사 OOO(과실 V→감경시 최소⁴)['18년 보조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없음

*1 공인회계사 000, 공인회계사 000은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낮으므로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하며, 00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00, 공인 회계사 000, 공인회계사 000, 공인회계사 000, 공인회계사 000은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 보다 낮으므로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가. 종속기업 영업이익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16년) 회사가 SL Lumax의 매출액, 매출원가 등 임의 조정액을 모두 '16년 4분기에 반영 함에 따라, '16년 4분기 재무제표에서는 전분기('16.3분기) 대비 매출액이 3.9% 감소한 데 반해 매출원가가 29.3% 증가하는 등 급격한 재무지표의 변동이 있었으나,
 - 감사인은 분석적검토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동 조정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또한, 감사인은 '16년 SL Lumax의 급격한 연간 매출원가율 상승이 인도 현지의 인건비가 20~30% 증가한데 기인한다는 부문감사인의 설명을 통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주장하나,
 - 감사인은 인도 현지의 인건비 상승률 20~30%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 SL Lumax 및 인도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 인건비가 20~30% 상승하였다는 부문감사인의 설명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를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 감사인이 확인한 것으로 주장하는 부문감사인의 설명내용도 조서화 되어있지 아니함
- ('17년) 감사인은 '17.3분기 클로징 미팅에서 SL Lumax 재무제표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필요한 경우 기말감사 시 SL Lumax에 대하여 별도의 감사절차를 취하겠다고 한 점,
 - 동 클로징 미팅 직전 본 건 위반사항과 매우 유사한 (주)OO의 감리조치사례를 회계팀에 전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감사인은 SL Lumax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위험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 감사인은 SL Lumax 재무제표의 특이사항에 대한 부문감사인의 답변이 매우 부실하였음 에도, SL Lumax 관련한 위 의문사항이 모두 해소된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18년) 감사인은 인도 부문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가적 적격성을 확인하고, 감사지시서를 통해 부문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감사절차를 전달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 '18년 기말감사 시 동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 (新양정기준) 이는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행위 판단기준)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및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2),3)]

(정보의 중요성 기준) 동 지적건과 관련한 ’18년 위반금액의 규모배수(1.71)가 4배 미만이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곤란[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나.1)]

나.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세무조정 및 세액공제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외국납부세액 공제효과 반영 관련 회사의 설명을 듣고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였으나,
 - 회사의 상황과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 (舊양정기준) 이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감사절차는 대부분 취하였으나 회사의 특성을 감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적용한 감사절차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발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과실”로 판단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3.나.2)]

⇒ (新양정기준)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를 ‘과실’로 판단[新심사·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2.가.3) 및 III.2.나.1)]

- 규모배수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나,
 - 이는 “그 밖의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新심사·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2.가.3) 및 III.2.나.1)]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가중 : 해당사항 없음
- 감경 : 공인회계사 000 및 000에 대해서 2단계 감경하며, 00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00 및 000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보간법을 사용하여 환산한 결과 1단계 감경하며, 공인회계사 000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16.6.22.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1단계 감경

- (공인회계사 000, 공인회계사 000)

- (나.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은 회사가 이연법인세 부채 과대계상 오류를 감리착수일('19.9.20.) 전 수정·공시('19.4.1.)하도록 조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2단계 감경 [舊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 VI.3.나.3)]

- (OO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00, 공인회계사 000)

- (나.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은 회사가 이연법인세 부채 과대계상 오류를 감리착수('19.9.20.) 전 이미 수정·공시('19.4.1.)하도록 조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단계 감경 [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3.나.5)]

- 감경사유 적용한 중요도 배수 산출근거

연도	위 반사항	위 반동기	감경전 중요도배수 (a)	감경 환산 (b)	감경 후 중요도배수 (c=a*b)
제46기*1 ('13년)	나.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과실	4.16	1/4	1.04
	합 계	과실	4.16(III)	1/4	1.04(V)
제47기*1 ('14년)	나.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과실	4.84	1/4	1.21
	합 계	과실	4.84(III)	1/4	1.21(V)
제48기*1 ('15년)	나.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과실	5.16	1/4	1.29
	합 계	과실	5.16(III)	1/4	1.29(V)
제49기*2 ('16년)	가.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과실	1.83		1.83
	나.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과실	5.44	1/2	2.72
	합 계	과실	7.27(III)		4.55(III)
제50기*2 ('17년)	가.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과실	3.66		3.66
	나.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과실	5.24	1/2	2.62
	합 계	과실	8.90(II)		6.28(III)
제51기*2 ('18년)	가.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과실	1.71		1.71
	합 계	과실	1.71(V)		1.71(V)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 적용

*2 현행 양정기준 적용

- *4 보조책임자로 주책임자보다 1단계 낮게 조치 [舊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VII.2, 新심사·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VII.2]

4. 참고사항

가. 제5차 감리위원회 심의완료(2020.5.7.)

나. 관계법규 (붙임1)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1)

에스엘(주)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에스엘(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에스엘(주)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0 00 000000 00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에 의하여

- 에스엘(주)에 과징금 1,784,700,000원을 부과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 에스엘(주) 대표이사 000에게 과징금 178,400,000원을 부과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 에스엘(주) 공시담당임원 000에게 과징금 178,400,000원을 부과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 에스엘(주)는 2021회계연도(2021.1.1.~2021.12.31.)부터 2023회계연도(2023.1.1.~2023.12.31.)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 에스엘(주)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공시담당임원 000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하며,
 - 에스엘(주)에 대하여 6개월('20.6.1.~11.30.) 동안 동인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명한다.
- 에스엘(주) 및 공시담당임원 000을 각각 검찰에 통보한다.
- 에스엘(주)는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에스엘(주)은 제46기(2013.1.1.~2013.12.31.)부터 제51기(2018.1.1.~2018.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 (연결기준, '16년 12,980백만원, '17년 24,899백만원, '18년 13,729백만원)
 - 에스엘(주)는 종속기업인 SL Lumax Industries Limited(이하 'SL Lumax')의 영업이익 증가가 고객사의 단가인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 2016년 ~ 2017년 기간중 SL Lumax의 영업이익을 각각 12,980백만원, 11,919백만원 과소계상하였으며,
 - 2018년에는 SL Lumax의 영업이익을 11,170백만원 과대계상하였음
 -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연결기준, '13년 23,600백만원, '14년 29,990백만원, '15년 33,871백만원, '16년 38,684백만원, '17년 35,632백만원)
 - 에스엘(주)는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하였음

나. 근거법규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43조 등
 -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업 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임원의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유가증권 발행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175조
 -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1년의 범위에서 증권 발행제한 ②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③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④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⑤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문단 15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9

-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하고, 이는 실제로 비용의 인식이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문단 51

-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 효과를 반영해야 함

(별지2)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0 00000 000 0000

☐ 000 [제46기('13년) 주채임자]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 000 000 000 000 0000000000 000-000

☐ 000 [제47기('14년) ~ 제49기('16년) 주채임자]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 000 000 00000000 000-0000

☐ 000 [제50기('17년) ~ 제51기('18년) 주채임자]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 0000 00000 000000 00 0000

□ 000 [제49기('16년) ~ 제50기('17년) 보조책임자]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00
- 주소 : 000 000 000 0000-00 0000 0000

□ 000 [제46기('13년) ~ 제48기('15년) 보조책임자]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00
- 주소 : 000 000 000 000 00000000 0000 000000

□ 000 [제49기('16년) 보조책임자]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00
- 주소 : 000 0000 0000000000 00 0000

□ 000 [제51기('18년) 보조책임자]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00
- 주소 : 00 0000 0000000 0000000000 0000 000000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3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00회계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며,

공인회계사 000은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하여 조치하지 아니한다.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하여 조치하지 아니한다.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하여 조치하지 아니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00회계법인은 에스엘(주)의 제46기(2013.1.1.~2013.12.31.)부터 제51기(2018.1.1.~2018.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

○ 종속기업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기준, '16년 12,980백만원, '17년 24,899백만원, '18년 13,729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16년~'18년 기간 중 종속기업인 SL Lumax Industries Limited(이하 'SL Lumax')의 매출액을 과소(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하여 영업이익을 과소(과대)계상하였음에도,

- SL Lumax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기준, '13년 23,600백만원, '14년 29,990백만원, '15년 33,871백만원, '16년 38,684백만원, '17년 35,632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 법인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회계감사기준」 500

- 상기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공인회계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붙임1)

관 계 법 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조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 4.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 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 5. <생 략>

제18조의2(자료제출의 협조 요청)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 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주권상장법인
 -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⑤~⑦ <생 략>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 1~6. <생 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20. <생 략>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 ③ <생 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5. <생 략>
- ③~⑧ <생 략>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및 결합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생 략>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 3.~4. <생 략>
- ② <생 략>
- ③ 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

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삭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 ③ 삭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책임자에게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

위 당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다음 각 호의 자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략>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삭제

제56조(고발등) ① 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증선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정황으로 보아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 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 ~ ⑥ 삭제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 ⑧ <생 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 ⑦ <생 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 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14. <생 략>

부칙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임직원

-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3. 조치등의 가중·감경

가. 가중사유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에게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 ④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

로 정한다.

1. <생 략>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5.28.>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4.12.30.>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④ <생 략>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② 법 제1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 4. <생략>

② <생략>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단서신설 2015.7.14.>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5.7.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舊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수익)

14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50 비용은 발생한 원가와 특정 수익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수익에 원가를 대응시키는 과정에는 동일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따라 직접 그리고 공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또는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재화의 판매에 따라 수익이 발생됨과 동시에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비용요소가 인식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개념체계 하에서 대응개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49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비용의 인식이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종업원급여의 발생에 따라 부채의 증가가 인식되며 설비의 감가상각에 따라 자산의 감소가 인식된다.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제1012호(법인세)

38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또는 공동약정 투자지분(즉,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 또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여 순자산 중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의 지분)의 장부금액이 당해 투자자산 또는 지분의 세무기준액(대개 원가임)과 다른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공동약정의 미배당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후략)

39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1) 지배기업, 투자자,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2)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 「회계감사기준」

500 감사증거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1. 어떤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감사인이 감사증거로 이용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20 분석적 절차

4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분석적 절차”란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간의 개연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적 절차에는 다른 관련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조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7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 감사인이 다른 관련정보와 불일치하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

- (a)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경영진의 답변과 관련성이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 (b)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A18 이와 같은 분석적절차의 결과, 이전에 인식되지 않았던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315는 그러한 상황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계획된 추가감사절차를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308